고건 前 총리등 사회원로

기초선거 공천 폐지 촉구

고 건 전 총리 등 사회 각계원로 30여명이 공동선언을 통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도 폐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공천제는 온갖 공천비리와 추악한 정치부패를 초래하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어 여야 정치권에 대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즉각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사회원로 선언문에는 고건·이홍구·이수성 전 국무총리와 서영훈 전 적십자사 총재, 이부영 화해상생마당운영위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정·관계와 시민사회 주요 원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道 폐지 앞서 지방 자율성 늘려야"

■ 한국지방신문協 '행정체제개편' 종합토론회

"연내 특별법 제정해 2014년 적용"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와 희망제작소가 지난 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가진 토론회를 총정리하는 종합토론회를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여야 행정체제개편 특위 위원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서 '행정체제개편 논란, 현장과 지역이 말하는 원칙과 대안은'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희망제작소가 발제한 그동안 8번의 순회 토론회 종합보고 내용과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 정리했다.

◇**도의 폐지 및 시·군 통합 문제**=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발제문에서 도(道) 폐지론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의 자율성 훼손과 신(新) 중앙집권을 우려하고 있다"며 "자치계층 축소에 앞서 광역과 기초단체 간 역할과 기능의 합리적 배분, 국가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보고했다.

윤 부소장은 또 "도를 폐지해 자치계층을 줄이고 시·군을 통합해 광역화하는 국회 중심의 개편안은 지나치게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 발언**=특위 간사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지방자치가 지방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은 ▲특별시 자치구 통합(25개→4~5개) 및 기존 자치구의 행정구 전환 ▲광역시 존치 및 기존 자치구·군의 행정구 전환(인구 100만 이상일 경우 자치단체로 운영) ▲시·군 통합 ▲공무원 철수를 통한 읍·면·동의 준자치구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백재현 위원은 "시·도간 경계를 넘는 통합이 추진돼야 한다"며 "올해 안에 특위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제정하고, 차기 지방선거 후 차차기 지방선거인 2014년 이전에 본격적으로 지방행정체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간사는 선진당이 주창해온 '강소국연방제'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와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안정성 확보에 있어 필수적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전국지도시사협의회 정책실장은 미국 사례를 통해 통합광역시의 폐해를 지적한 뒤 ▲지방분권 우선 추진 ▲검증된 자치계층의 중층제 유지 ▲주민에 의한 자율적 통합 등을 제시했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 교수는 도(道) 폐지론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뒤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전제로 한다면 '도'는 지금의 기능이 아니라 5+2 체제와 연결해서 현재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기능을 새로 이양 받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존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도'의 본청이 비대해지고 도지사의 권한 집중현상만 강화돼 지역 내에서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며 "주민여론조사에서는 과거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선호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잭슨 '자녀 양육권·유산' 법정 공방 돌입

잭슨의 갑작스런 죽음을 둘러싸고 의문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은 잭슨의 죽음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으며 잭슨의 자녀 양육권과 유산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잭슨의 어머니 캐서린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잭슨의 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LA타임스 등이 전했다.

캐서린은 또 잭슨의 세 자녀에게 유산이 상속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을 유산 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일단 캐서린이 임시로 아이들을 맡아 돌보도록 했다고 ABC 방송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프린스 마이클 주니어(12), 패리스 마이클 캐서린(11), 프린스 마이클 2세(7) 등 잭슨의 세 자녀는 잭슨이 사망한 이후 캐서린과 함께 지내고 있다. 장남 마이클과 딸 패리스는 두번째 부인 데비 로우가 낳았고 막내아들 마이클 2세는 대리모를 통해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온두라스 쿠데타軍 '자유의 광장' 점거 온두라스 쿠데타 군인들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수도 테구시갈파 대통령 관저 부근의 자유의 광장에 모여있다. 마누엘 셀라야(56) 온두라스 대통령이 집권 연장을 위해 밀어붙인 개헌 국민투표 개시를 앞둔 지난달 28일 새벽 이에 반대하는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 셀라야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로 추방됐다. /연합뉴스

153명 태운 예멘 여객기 추락

153명을 태운 예멘 국영항공사 여객기가 지난달 30일 오전(현지시간) 인도양의 섬나라 아프리카 코모로 해상에 추락했다.

예메니아항공에 따르면 사고가 난 에어버스 310 여객기는 이날 오전 예멘 수도 사나를 출발, 코모로 수도 모로니로 향하던 중 코모로에서 수km 떨어진 해역에 추락했다고 AP, AFP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사고 해역에서는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며 일부 승객들의 시신과 기름띠가 발견됐다고 예멘 관계자는 전했다. 생존자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 예멘 한국대사관은 항공사에 직원을 보내 한국인 탑승 여부를 조사 중이지만 이날 오전 9시(한국시각 오후 3시) 현재 한국인 탑승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디 나드호임 코모로 부통령은 사고가 이날 이른 시간에 발생했다면서 "탑승자 150명 가운데 생존자가 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지 관리들은 사고기가 악천후 속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아마디네자드 재선 확정…이란 사태 진정 국면

이란 헌법수호위원회가 부분 재검표 끝에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현 대통령의 재선을 확정했다.

그러나 낙선자인 미르 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는 헌법수호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수용치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선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란 헌법수호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대통령선거에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현 대통령이 당선됐음을 확정했다고 국영방송 IRIB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나티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장은 내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대선 결과가 정확했음을 승인한다고 밝혔다고 IRIB는 전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조선대 '이유 있는' 고민

채희종 사회1부 차장

조선대는 최근 1~2년 사이 정부 눈치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다. 국책사업을 따내거나 예산을 배정받기 위함이 아니다.

그렇다고 곱게 보여 혜택을 보겠다는 심사도 아니다. 단지 정부에 '미운 털'이 박히거나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0여년의 임시이사 체제를 마감하고 정상화를 기대해왔던 조선대의 분위기는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극도로 위축돼 있다. 새 정권이 시작되면서 노무현 정권 때 추진됐던 조선대 정상화 문제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임시이사 파견 사학 4곳 중 학교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른 조선대를 우선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조선대는 정상화 절차를 밟았으나 지난 해 정권이 바뀌자 사정이 180도 변했다.

조선대로 하여금 2년여 동안 정상화 과정을 밟도록 했던 교과부가 돌연 태도를 바꿔 임시이사를 재파견한 것이다.

임시이사 재파견 결정에 대해, 조선대 구성원들은 대학의 정상화 수준이 미흡한데 따른 결과가 아니라 정부의 조선대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믿고 있다. 즉 정부가 조선대를 좌파 성향의 대학으로 분류하면서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2월 사분위 위원으로 선임된 고영주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학재단들이 좌파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한 점에서 보듯 조선대의 우려는 기우(杞憂)가 아님은 확실하다. 조선대의 '정부 눈치 보기'는 여기에서 시작된 셈이다.

조선대 측은 한국 현대사 격변기인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사학들이 학내 민주화운동을 벌였으며, 조선대도 그중 하나로 비리 경영진을 축출한 것일 뿐인데 2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대학을 어떻게 이념의 잣대로 나누느냐고 항변하고 있다. 20년 동안의 경영상태와 학문 성과, 학생 충원율 및 취업률 등으로 정상화 여부를 판가름해 달라는 것이다.

최근 보수성향의 선진화교수연합이 국정쇄신을 촉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비판한 반(反)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조선대 교수 명단을 도용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조선대는 대학 또는 교수평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 했다. 하지만 이내 해당 교수 개인의 문제라며 한 발짝 물러섰다.

그 배경에 대해 조선대 관계자는 "어떤 형태로든 집단적으로 나설 경우 일부 보수세력들이 또다시 좌파 대학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우려했다. 하지만 그보다 두려운 것은 이를 빌미로 정상화가 또 미뤄지고 혹여 학생들의 취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고 토로했다.

자유와 진리를 가르쳐야 할 교수들이 대학 정상화와 졸업생 취업이라는 '현실적 대의(?)'를 위해 입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chae@kwangju.co.kr